



2011 년 경제정책개혁: 성장 모색

국어 개요

- 대공황 이후의 최대 경기침체로부터 세계경제의 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거시경제 부양책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아직 상당수 국가에서 지속적인 높은 실업을 뚜렷이 줄이지 못했다. 2011 년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서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장기성장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구조개혁들에 주목한다. 각 OECD 회원국에 더하여 처음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 등의 6 개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향후 10 년간의 지속성장에 가장 효과적일 5 대 최우선 개혁과제를 확인한다. 이러한 개혁들은 대부분이 시급한 건전재정 확립에 도움이 되면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다.
- 여기에 소개된 국제비교 지표를 통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진 각국의 경제성과와 구조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 또한 금번 보고서에서는 주택정책과 의료제도의 효율성, 구조정책과 경상수지 불균형 간의 관계 등을 3 개의 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세계경제 회복이 한동안 진행돼왔지만 여전히 거시경제 부양책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인 높은 실업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감당할 수 없게 늘어나는 공채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점차 철회해야 되고 통화정책 효과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OECD 국가정부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정책 위주의 경제회복을 자생적인 성장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금융규제를 제한 나머지 영역에서 늦추어진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경제위기 후 회복 단계에서는 가장 단기 성장에 이로우면서 실업자와 노동시장 밖의 사람들이 노동시장과 계속 접촉하도록 이끄는 개혁들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금번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에 더해 처음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 등 소위 BRIICS 라는 주요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향후 10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데 가장 효과적인 5 대 우선 개혁과제를 확인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노동생산성과 노동활용도 성과가 가장 높은 국가와의 격차로 측정된 각국의 성과 부족분과 정책적 약점 간의 매핑을 토대로 도출한다. 우선순위설정 작업에 따른 주요 성과는 1 장 개요에서 요약하고 2 장에서 국별 검토로 보다 상세히 서술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광범위한 정책의 도전에 맞선 OECD 고소득국은 대략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그룹은 주로 노동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유럽대륙 국가로 구성된다. 따라서 복지제도 개선, 일자리 보호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성 해소, 노동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 등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이며 상품시장 개혁도 눈에 띄는 특징에 속한다. 이 외 비교적 잘사는 OECD 국가들이 안고 있는 도전은 덜 편중된 모습인데 아시아 국가들은 노동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시로 네트워크부문의 규제, FDI 제한, 조세 구조,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권고된다.
-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2010 년에 OECD 에 가입한 저소득국들과 BRIICS 는 교육제도와 상품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훨씬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이 영역에서 개혁은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또한 비공식 부문의 노동도 이들 국가에게 특유한 정책과제를 제기한다. BRIICS 에서 필요한 개혁이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BRIICS 의 우선순위정책의 본질은 OECD 저소득국들과 내용 면에서 흡사하다. BRIICS 와 일부 OECD 저소득국을 향한 권고사항은 종종 부패 해소를 위한 가버너스 개선에 더하여 사법제도 개혁, 계약 집행 등도 포함한다.
- 위기 후 여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를 신속히 창출하게 할 개혁에 프리미엄이 붙는다. 우선과제로 확인된 정책 가운데 경쟁 장벽 감소(예로 소매상 또는 전문직),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벽 제거 등을 이러한 개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부 확인된 우선과제에 착수하면 현재 환경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인 높은 실업의 지속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실업수당 보장 기간 및 범위 확장 등의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대응은 불황이 실업에 끼치는 악영향을 억제시키면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경제 여건이 서서히 변하는 만큼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경기회복기의 고용 비중을 늘리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혁방안으로 지출 증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개혁, 고용보호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더 나은 소득이전제도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 위기 후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은 보다 명백해지는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 취약해진 재정 상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개혁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는 모호하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되는 개혁은 시급한 사안인 재정건전화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 구조개혁은 주로 장기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 균형에도 상당한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 수준을 촉진하는 개혁방안은 재정 건전화에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 감당하기에 벅찬 공공재정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구조개혁이 보다 시급해졌는데 특히 조세제도 개선, 교육 및 보건 분야의 효율성 증대 등은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개혁이다.

5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듯이 성장촉진형 구조개혁은 또한 경상수지 불균형에 이로운 연쇄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경제위기 때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큰 격차를 보이는데 별도의 정책을 실행치 않는다면 이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개혁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가계와 기업의 저축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정부의 저축 및 투자를 변경함으로써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장에 소개된 새로운 실증분석을 보면 그 자체로 바람직한 많은 구조개혁들이 일부 주요 경제영역에서 국내 저축과 투자 간의 차이를 좁히면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개발은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킬 것이며 잇따른 결과로 예비적 저축의 필요성이 줄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억제될 것이다.
-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 개혁은 소득수준을 높이고 저축과 경상흑자의 감축에도 한몫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적자가 더 가중될 것이다.

- 소매상 또는 전문직 서비스, 네트워크 산업의 상품시장 개혁은 자본지출을 장려함으로써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의 경상흑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예를 들어 귀속임대료에 대한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모기지 이자 공제와 같은 소비를 자극하는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는다면 미국은 물론 상당수 국가들의 가계 저축이 늘고 국제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시행하려면 경제가 보다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 금융시장의 고도화와 깊이를 더하는 금융시장개혁은 신흥경제국의 차입제약을 완화시켜 소비와 투자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일부 신흥경제국에서 보였던 경상흑자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혁에는 적절한 건전성 관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재정긴축, 독일과 일본의 상품시장 개혁, 중국의 공공의료지출 증가(GDP 대비 2%p 증가) 및 금융시장 자유화가 결합되어 글로벌 불균형이 1/3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금번 구조개혁평가보고서의 4 장에서는 빗나간 정책으로 최근 위기를 초래했었고 지금은 노동이동성과 고용 회복을 늦출 수 있는 원인이 된 주택 부문을 별도로 다룬다. 이 장에서는 신규 주택시장정책 지표와 OECD의 실증 분석을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에 이른다.

- 모기지시장의 혁신은 적절한 규제 감독과 신중한 금융 규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자유화와 모기지 혁신은 이전에 신용제약을 받았던 가계의 주택 구입을 부추겼지만 모기지시장의 규제개혁 역시 주택가격과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상당히 증폭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로 8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 사이, OECD 국가의 주택 가격은 평균 30% 올랐다.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건축허가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주택수요에 대한 주택공급의 대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주택가격의 지나친 변동성을 막는 데 이로울 것이다. 그렇지만 수요 변동성이 억제될 수 없으면 향상된 대응력은 주택 투자의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주택정책으로 주거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데 근로자와 일자리를 더 잘 일치시킴으로써 최근 위기에서 노동시장이 회복되도록 할 수 있다. 주택 구입에 수반된 고비용의 절감은 대출 여건과 주택공급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또한 비교적 엄격한 임대료제한법과 세입자-집주인 규제의 완화와 마찬가지로 주거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주택정책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설계해야 된다. 주택과 대체 투자를 동일하게 과세하여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중히 설계된다면 특정대상의 사회주택제도는 최소 비용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잘 설계된 이동주택수당은 주거이동을 직접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년 구조개혁평가보고서는 6 장에서 개인의 행복에 큰 역할을 하면서 장기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보건의료 부문을 다룬다. OECD 기구가 새로이 수집한 보건의료제도 효율성에 대한 자료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공공의료지출의 효과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만일 OECD 각국이 최고의 성과를 낸 국가만큼 효율적이 되면 OECD 국가들의 의료지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기대수명을 평균 2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 OECD 국가 중 1/3 이상이 효율성을 높이면 의료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2017년까지 10년간 기대수명을 지난 10년간 이루었던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 또는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면 OECD 공공지출이 평균 GDP의 2% 정도로 대폭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비용 효율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항상 좋은 성과를 보장하는 의료제도의 유형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도 유형보다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는 정책 설정에 있어 일관성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의료제도 가운데 모범관행을 채택해야 하며 모범관행은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그럼에도 국제비교를 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제도 운영에 관련된 기관 간의 협조체계 개선, 1차 의료의 문지기 역할 강화, 의료비용의 본인부담률 인상,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정보 보장, 공급자 지불체계 개혁 또는 병원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규제 조정 등의 요소들이 있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